

국제법

해설위원: 이상구 교수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윌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 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총평〉

신규 분야 다수 출제로 난이도는 예년에 비해 다소 상승
판례도 새로운 판례 및 국제경제법 판례 출제
ICC로마협약 인도에 대한 죄 문제가 최고난도 문제
기출지문 비중이 하락하고 새로운 지문 다수 출제
조약승계, ICSID, 역외적용 등이 새로 출제된 분야
상위권 85-90 예상

문 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국은 자기집행적 조약규정에 대해서는 수용이론을 적용한다.
- ② 영국은 이원론에 의거하여 의회의 이행법률 제정을 통해 조약을 적용한다.
- ③ 우리나라는 일원론에 의거하여 모든 조약을 변형 없이 직접 적용한다.
- ④ 독일은 연방 의회의 동의법률 제정을 통해 조약에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한다.

정답: ③

해설: ③논란이 있으나, 일부 학자들의 입장에 따르면 조약 자체에 국내법의 제정을 요구한 경우, 그러한 국내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조약이 이행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모든 조약을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③은 틀렸다고 볼 수 있다.

문 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국가의 동의표시권한에 대한 특정한 제한
- ㄴ. 사정의 근본적 변경
- ㄷ. 타방 교섭국의 기만
- ㄹ. 타방 당사국의 조약의 중대한 위반
- ㅁ. 후발적 이행불능
- ㅂ. 국가대표의 부정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ㅂ
- ③ ㄴ, ㄹ, ㅁ
- ④ ㄷ, ㅁ, ㅂ

정답: ②

해설: ㄴ, ㄹ, ㅁ은 조약의 정지 또는 종료 사유에 해당된다. 무효사유는 그 밖에도 중요한 국내법규정 위반, 착오, 사기,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 국가에 대한 강박, 강행규범 위반이 있다.

문 3.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사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교공관의 모든 공관원은 협약상 외교관에 해당한다.
- ② 외교공관의 공관장 계급은 파견국과 접수국의 합의에 따른다.
- ③ 공관장은 서열과 의례에 관계되는 것을 제외하고 계급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④ 공관장의 해당 계급 내 서열은 직무를 개시한 일자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정해진다.

정답: ①

해설: ①협약상 외교관은 외교공관장과 외교직원을 말한다. 공관원에는 행정직원, 노무직원, 개인적 사용인이 포함된다.

문 4. 세계무역기구(WTO)체제하에서 자유무역지역 및 관세동맹 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3국을 협정 체결 이전보다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자유무역지역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역내 관세가 실질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
- ③ 제3국에 대해, 자유무역지역 회원국은 단일한 관세를 부과해야 하지만 관세동맹 회원국은 상이한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
- ④ 최혜국대우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된다.

정답: ③

해설: ③관세동맹이 역외국에 단일한 관세를 부과하고, 자유무역지역은 상이한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

문 5. 1972년 채택된 유엔인간환경선언에 명시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월경성 환경피해를 야기하지 아니할 책임 원칙
- ②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 원칙
- ③ 사전주의 원칙
- ④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

정답: ①

해설: ②③④는 리우선언(1992)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인간환경선언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문 6.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ICSID 협약) 및 이에 의해 설립된 '투자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본부'(ICSI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분쟁당사자들은 상호 합의하에 ICSID 내에서 알선, 조정, 중재 및 재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 ② 분쟁당사자들은 ICSID에 분쟁을 회부하기로 서면으로 부여한 동의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 ③ 중재재판 준거법의 미합의시에 중재재판부는 분쟁당사국의 국내법과 국제법 모두를 적용하여야 한다.
- ④ 분쟁당사국들은 ICSID 협약에 따라 내려진 판정의 구속력을 승인하고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①ICSID 분쟁해결 방식은 조정과 중재 2가지만 있다.

문 7.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판소는 권고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임시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 ② 피소국이 관할권 부인만을 목적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확대관할권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 ③ 재판소는 선결적 항변 절차상 관련 당사자들이 제기하지 아니한 선결적 쟁점을 자발적으로 검토할 수 없다.
- ④ 권고적 의견 제도는 계쟁관할권 미수락 국가의 사건을 재판소에 맡기기 위한 우회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③선결적 쟁점은 관할권이나 재판적격성 문제를 말한다. 직권에 의해 자발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②확대관할권은 당사국간 묵시적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관할권을 말한다. IC판례(니카라과사건 등)에 의하면 관할권 부인만을 목적으로 소송참가한 경우 본안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참가가 아니므로 당사자로서의 참가가 아니며 따라서 확대관할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④ICJ가 권고적 의견을 통해 특정 국가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문 8.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영사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동의는 원칙적으로 영사관계 수립에 대한 동의를 포함한다.
- ② 교관계 단절은 영사관계 단절을 당연히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③ 영사기능은 외교공관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 있다.
- ④ 영사기관의 소재지와 등급은 파견국이 결정하여 접수국에 통보한 후 확정된다.

정답: ④

해설: ④파견국이 결정하되 접수국이 동의해야 확정된다.

문 9. 국외에서 이루어진 외국기업의 담합행위에 의한 자국 경쟁법위반행위에 대해 각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미국의 경우, 효과이론에 의거하여 규제할 수 있다.
- ㉡ 독일의 경우, 효과이론을 채용한 경쟁제한방지법에 근거하여 규제할 수 있다.
- ㉢ 유럽연합의 경우, 이행이론에 의거하여 규제할 수 있다.
- ㉣ 우리나라의 경우, 효과이론을 채용한 공정거래법에 근거하여 규제할 수 있다.

- ① \neg , \sqsubset
② \neg , \perp , \sqsubset
③ \perp , \sqsubset , \subseteq
④ \neg , \perp , \sqsubset , \subseteq

정답: ④

해설: 국내법의 역외적용을 위한 이론들이다. 효과이론은 역외에서 발생한 행위가 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역외의 행위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행이론(집행이론)은 역외에서 모의된 행위가 실제로는 역내에서 실행되었으므로 역내국이 역외행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그 밖에 두 단일경제체설이론이 있다. 이는 현재 자(子)기업의 행위에 대해 역외에 소재하는 모(母)기업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문 10.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승계란 영토의 국제관계 관련 책임이 한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② 국가의 일부 분리에 있어서 선행국 영토 전체에 유효한 조약은 각 승계국의 승계통고에 의해 효력을 가진다.
- ③ 새로 독립한 국가는 승계통고에 의해 기존 다자조약의 당사자로 될 수 있다.
- ④ 조약에 의해 수립된 국경은 국가승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답: ②

해설: ② 국가의 일부 분리(분리독립)의 경우 협약상 '계속주'가 적용된다. 즉, 승계무가 있다. 따라서 승계통고를 조건으로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③은 신생독립에 대한 것이다. 신생독립국은 '백지출발주의'가 적용되어 승계무가 없다. 그러나, दातजात्य의 경우 '통고'에 의해 승계할 수 있다. 양자조약은 기존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승계할 수 있다. ④국경선 획정 조약과 같은 '차분적 조약'은 '계속주'가 적용되므로 승계무가 있다. 즉 승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문 1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체약국은 인종, 종교 또는 출신국에 의거하여 난민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체약국은 난민의 귀화를 장려하는 정책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체약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난민을 추방할 수 있다.
- ④ 체약국은 생명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로 난민을 추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②

해설: ② 협약 제 34 조 “체약국은 난민의 동화 및 귀화를 가능한 한 장려한다. 체약국은 특히 귀화 절차를 신속히 행하기 위하여 또한 이러한 절차에 따른 수수료 및 비용을 가능한 한 경감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 ③ 난민추방은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를 이유로만 할 수 있다. ④ 강제송환금지원칙이라고 한다.

문 12.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안전보장이사회는 자체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 ② 안전보장이사회는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③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은 국제연합 소재지에 대표를 항상 두어야 한다.
- ④ 회원국은 자국 관련 안전보장이사회 토의에 참석하여 투표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④토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투표는 할 수 없다. ②헌장 제7장상 결의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문 13.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배타적경제수역 내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 대상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 목적의 활동
- ㉡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활동
- ㉢ 해양과학조사
- ㉣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
- ㉤ 해풍을 이용한 경제적 개발과 탐사를 위한 활동

-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정답: ③

해설: 협약은 EEZ에 있어서 국가의 권리를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으로 구분한다. 해양환경보호, 해양과학조사, 인공섬 설치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갖는다. 천연자원의 탐사, 수력·조력·풍력의 활용에 대해서는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문 14.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WTO DSB)가 다룬 환경 관련 분쟁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2006년 유럽공동체(EC) 유전자변형식품(GMO) 사건
- ② 2007년 브라질 타이어 사건
- ③ 2013년 유럽연합(EU) 물개 사건
- ④ 2014년 일본 포경 사건

정답: ④

해설: ④ 국제사법재판소(ICJ) 판례이다. 일본이 고래보호관련 조약상의 예외조항을 남용하여 고래를 포획한 것이 협약에 위반된다고 본 판례이다. 호주가 제소한 사건이다. ① EC가 미국의 GMO에 대한 수입을 제한한 사건으로서 '위생 및 검역조치 협정(SPS)'에 대한 사례이다. ② 브라질이 EU산 페타이어의 수입을 금지한 사건으로 1994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에 대한 사례이다. ③ EU가 캐나다산 물개 제품에게 대해 수입을 금지한 사건으로 '기술무역장벽협정(TBT)'에 대한 사례이다.

문 15. 국제법상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연합헌장」 제51조는 개별적 자위권뿐만 아니라 집단적 자위권도 국가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 ② 국제사법재판소는 니카라과 사건에서 「국제연합헌장」 제51조의 자위권이 기존의 국제관습법상 자위권 개념을 모두 포섭하고 있다고 보았다.
- ③ 국제사법재판소는 Oil Platforms 사건에서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무력공격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침국에 있다고 확인하였다.
- ④ 국제사법재판소는 Oil Platforms 사건에서 사망자가 없는 함정 피격에 대응하여 순양함을 포함한 여러 척의 해군 함정과 비행기를 공격한 행위가 자위권 행사의 비례성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정답: ②

해설: ② 니카라과 사건에서 ICJ는 헌장 제51조는 기존 관습법상 자위권 개념을 모두 포섭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고, 따라서 관습법과 헌장을 모두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필요성이나 비례성과 같은 자위권 요건이 헌장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관습법상 요건에 해당되므로 자위권을 주장하는 국가는 이들 요건도 준수해야 한다고 하였다.

③④ Oil Platform 사건은 이란이 미국을 ICJ에 제소한 사건으로서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자위권으로 항변한 사건이다. 이란이 미국계 선박에 대해 무력공격을 가한 것에 대해 미국이 이란의 정유시설을 공격하여 파괴하고 이를 자위권으로 정당화하고자 하였으나, ICJ는 먼저 선박에 대한 공격은 무력공격으로 볼 수 없으며, 설명 인정되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공격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문 16.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할 범죄 중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인도에 반하는 죄를 구성하는 체계적인 공격은 반드시 국가의 공식적인 정책일 필요는 없다.
- ② 인도에 반하는 죄는 무력분쟁 상황 등 전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 ③ 인도에 반하는 죄를 구성하는 공격은 폭력적 형태로 자행된 행위만을 포함한다.
- ④ 인도에 반하는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격에 대한 인식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정답: ①

해설: ②반드시 전시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신체 또는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대하여 중대한 고통이나 심각한 피해를 고의적으로 야기하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인도적 행위 등도 인도에 반하는 죄에 포함된다. 즉, 폭력적 형태로 자행된 행위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④ 협약 제7조 1항. “인도에 반한 죄라 함은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그 공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범하여진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공격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문 17.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가의 행위가 상업적 성격을 지닌 경우에는 국가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② 국가의 행위가 2001년 초안 규정상 국제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책임이 가중된다.
- ③ 대응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책임국과 관계에서 적용되는 분쟁해결 절차상의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 ④ 국제위법행위의 법적 결과에는 의무 위반 중지 및 재발방지, 계속적 의무 이행, 만족이 포함된다.

정답: ④

해설: ①상업적 성격이더라도 국가귀속성이 인정된다. 국가책임에서는 직무행위인가가 중요한 기준이다. ②2001년 초안에는 국제범죄 규정은 없다. 1980년 잠정초안에서는 국제범죄에 대해 비피해국에 의한 책임추궁을 인정하였다. ③분쟁해결절차상의 의무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즉, 분쟁해결조항에 대해서는 대항조치를 취할 수 없다.

문 18. 우주물체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타국의 지구 표면이나 비행 중인 항공기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과실이 있을 때에만 책임이 발생한다.
- ② 지구 표면 외의 장소에서 타국의 우주물체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절대책임이 발생한다.
- ③ 국제책임은 우주물체의 발사를 의뢰한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발사를 실시한 국가는 면책이 된다.
- ④ 비정부주체가 우주물체를 소유하고 발사한 경우에 대해서도 소속국이 국제책임을 져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①무과실책임 또는 절대책임이 인정된다. 즉, 가해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이 성립한다. ②과실책임이 성립한다. ③발사를 의뢰한 국가 뿐 아니라 발사를 실시한 국가도 협약상 ‘발사국’에 해당된다.

문 19.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공해로부터의 무허가방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선박의 기국은 무허가방송 중사자를 자국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 ㄴ. 모든 국가의 군함은 무허가방송에 중사하는 선박에 대해 임검권을 갖는다.
- ㄷ. 무허가방송 중사자의 국적국은 그 중사자를 자국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 ㄹ. 해적방송이 수신되지만 허가된 무선통신이 방해받지 않는 국가는 무허가방송 중사자를 자국 법원에 기소할 수 없다.
- ㅁ. 시설의 등록국은 무허가방송 중사자를 자국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ㅁ

정답: ③

해설: ㄴ-보편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ㄹ-해적방송이 수신되는 국가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 20. 국제법상 주권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는 주권면제에 관한 국내법의 제정 없이 국제관습법의 형태로 주권면제론을 수용하고 있다.
- ② 제한적 주권면제론에서는 주권면제 대상이 국가의 주권적 행위로 한정되고 상업적 행위는 배제된다.
- ③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면제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면제는 국제법에 따라 주어지는 국가원수의 면제와 특권을 저해하지 않는다.
- ④ 국제사법재판소는 2012년 페리니(Ferrini) 사건에서 국제법상 강행규범을 위반하는 국가행위에 대해 주권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답: ④

해설: ④2012년 ICJ 판례는 독일이 이탈리아를 상대로 제소한 사건에 대한 것으로서 ‘국가면제 사건’이라고 한다. 이 사건에서 이탈리아는 법정지국 밖에서 발생한 불법행위가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면, 전통적인 국가면제법과 달리 면제가 제한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ICJ는 전통적인 국가면제법을 수정하는 새로운 관습이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기존 관습대로 법정지영토 밖에서 발생한 행위라면 그것이 강행규범 위반이라 할지라도 국가면제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